

동북아시아의 한반도 공간구상과 균형발전전략

2005. 6

순서

1. 세계질서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향
2. 혁신주도형 균형발전전략의 추진
3.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4. 수도권 발전대책
5. 개방형 다극 혁신 국토건설로 통일한국 토대 구축

국가균형발전위원회

1 세계질서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향

● 세계 및 동북아 질서의 재편과 한반도의 위협

- 세계는 지금 국경을 초월하는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한편, 경제 블록화와 민족주의의 대두 등 **분절화**가 동시에 진행
- 동북아는
 - 중국의 급부상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일본의 세계 전략**
 - 일본에 의한 **영토분쟁과 교과서 문제**
 - 북한 핵개발로 인한 **남북관계 교착상태** 지속 등**평화와 불안정**이라는 이율배반적 상황이 전개

● 우리의 선택 : 혁신주도형 균형발전을 통한 국력증진

- 급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우리의 **국부와 국력**을 증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지식·기술 중심의 **혁신주도형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
-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에 따라 **기술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으로 전환하여 개발년대부터 지속되어온 **요소투입형 성장**의 한계를 극복
- 지역의 비교우위를 살린 **특성화 발전**으로 전국토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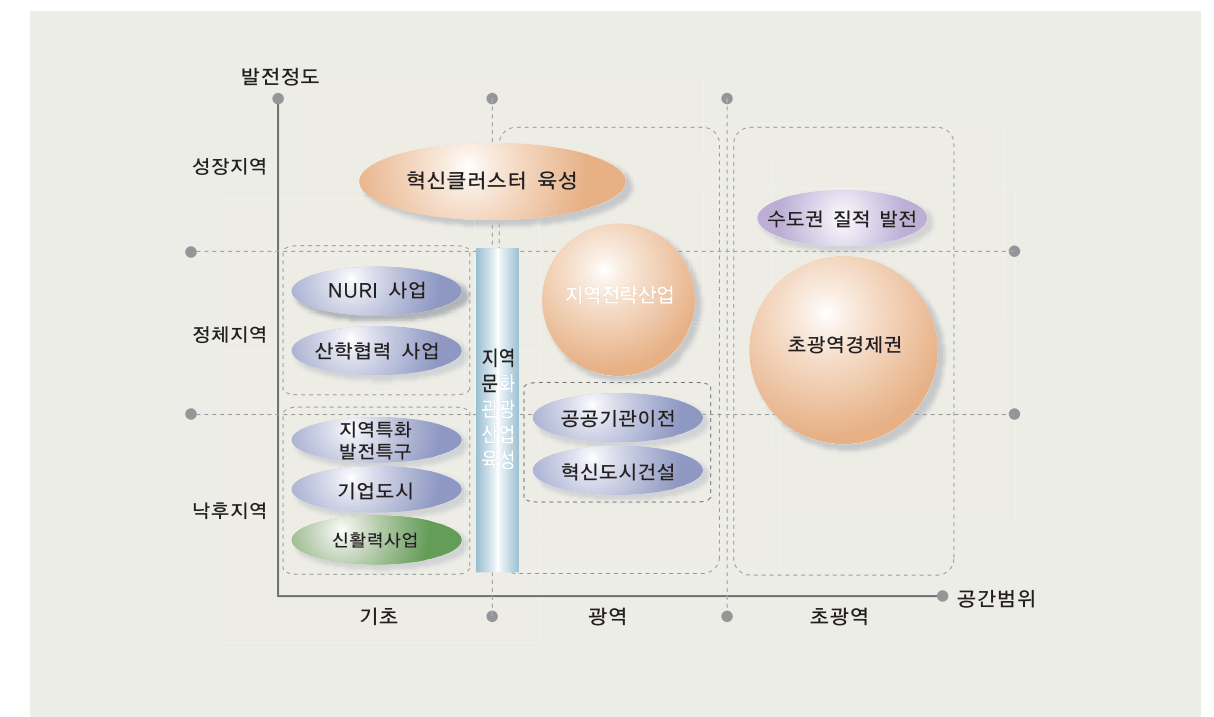
혁신주도형 발전전략

- 연구개발의 사업화, 기술거래·창업활성화, 산학협력 및 교육혁신, 지역인재 양성 등 추진

균형발전전략

-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과 공동번영**이라는 큰 틀 속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지역전략산업 및 혁신클러스터 육성, 신활력사업 추진, 수도권의 질적 발전 등 추진

공간범위(기초, 광역, 또는 초광역)와 **지역발전정도**(낙후지역, 정체지역, 성장지역)에 따라 특성에 맞게 추진



3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 수도권에 과다하게 집중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역의 특화발전과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

- 수도권은 혁신에 기반을 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여 **질적 발전**의 계기로 활용

●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 중에서 180개 내외 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수도권 잔류기준에 해당하는 160여개 기관은 제외 :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의 발전정도를 감안하여 균형있게 배치
-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연계하여 산·학·연·관 혁신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군을 집단이전

※ 프랑스는 53,000명, 영국은 47,000명, 스웨덴은 11,000명 규모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

● 혁신도시(지구)를 조성하여 공공기관, 대학, 기업 등이 상호 유기적 협력으로 혁신을 창출하고 지역특화발전을 선도

- 산학협력 관련기관 및 지원서비스 기능을 배치하고 다양한 협력프로그램 운영 지원
- 지방에 정착하여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양질의 주거·교육·문화·여가·정보기능·녹지·경관 등을 구비

※ 프랑스 소피아 앙띠폴리스와 미국 실리콘밸리의 혁신환경, 영국 밀턴 케인즈의 정주환경을 갖춘 도시(지구)로 개발

4 수도권 발전대책

● 지방과 상생발전하는 쾌적하고 경쟁력 있는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

- 기존의 양적 팽창에서 질적 발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
- 입지규제 중심의 소극적 접근에서 벗어나 산업클러스터 육성 등 **적극적 수도권 발전**을 추진

● 2천만 시민의 생활터전으로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수도권으로 재창조

- 서울은 국제비즈니스·금융, IT·BT기능을 강화하여 도쿄, 상해 등과 경쟁하는 동북아 거점도시로 육성
- 인천은 물류·해양·관광중심의 동북아 관문도시 구현
- 경기도는 첨단·지식기반산업의 메카로 육성

● 인구안정화를 전제로 수도권의 삶의 질을 세계수준으로 제고

- OECD 수준의 대기질 확보, 수질 1등급의 생활환경 구비
- 용산기지를 민족공원화하고, 한강 수변공간을 시민휴식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

※ 뉴욕의 경쟁력과 시드니의 쾌적성을 결합

● 수도권 규제개혁의 범위·시기 등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지방화 추진속도와 연계

- 단기적으로는 공장총량제 등 기존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선별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지자체가 참여하는 **계획관리체제**로 전환

5 개방형 다극 혁신 국토건설로 통일한국 토대 구축

- 동북아시아의 창조적이고 강력한 대한민국의 건설
 - 혁신주도형 균형발전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창조적이면서도 강력한 한국(Creative and Strong Korea)”을 건설
 - 이를 통해 세계화, 지식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국제정치적 불안정과 남북관계의 교착상태를 극복
- 특히, 수도권 일극중심의 국토구조를 역동적인 “개방형 다극 혁신구조”로 재편하여 국력 극대화와 통일이후를 대비
 -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반도국가의 지정학적 이점을 살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시작으로 국내외적 경쟁력을 갖춘 다수의 지역경제권 형성
 - 창의적 인재 양성, 산학협력 활성화, 기술사업화 촉진 등을 통한 혁신주도형 지역발전 도모
 - 지역전략산업 육성, 산업단지 및 연구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수도권의 질적발전 등을 통해 지역특화 및 균형발전 달성
- 동북아의 IT, 물류, 관광 등 분야의 허브로 육성
 - 내륙의 혁신거점인 혁신클러스터와 혁신도시 등과 연계하면서 서해안, 동해안, 남해안축의 대외개방 거점도시를 육성하여 환황해, 환동해, 환남해 경제권 형성을 주도

혁신주도형 균형발전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개방형 다극 혁신 국토구조”로 개편함으로써 국력을 극대화하고, 향후 통일에 대비하여 한반도 전체의 잠재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